

금융위원장 인사말씀

2016. 12. 16.

금 융 위 원 회

※ 본 원고는 실제 발언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.

- 반갑습니다.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.
- 살얼음판과 같이 불확실성이 큰 현재 상황에서, 경제의 활력 제고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빈틈없는 대응이 필요함
 - 특히,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서민·취약계층 지원은 가장 우선해야 하는 과제이며,
 -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시 연체가능성이 높은 서민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
- 정부는 그간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이 **상환능력에 따라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제도를 꾸준히 개선함**
 - '02년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 등 사적채무조정*을 통해 약 130만명에게 만기연장,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였음
 - * 개인워크아웃 : 연체일수 3개월 이상, 원금 및 이자 감면 등 지원
 - * 프리워크아웃 : 연체일수 1개월~3개월, 이자 감면 등 지원
 - 특히, 성실상환자에 대해 자산형성 상품* 제공, 소액신용카드 발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여,
 - * 약정금액 60% 이상 성실 상환한 취약계층 등이 저축 가입시 연 8% 금리 제공
 - 채무조정자의 성실상환을 유도하고 채무조정이 서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음
- 다만, 상환능력이 없는 서민의 경우 사적채무조정보다는 법원의 공적채무조정을 통해 지원받을 필요가 있음

□ 이런 분들이 부담없이 법원의 개인회생·파산 등 공적채무조정을 거쳐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

○ '13.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와 서울중앙지방법원과의 협력을 통해 'Fast-Track(채무조정 신속 연계제도)'를 시행하였으며,

- 현재 5개 지방법원*의 관할지역에서 시행중임

* 서울, 부산, 광주, 의정부, 대전

○ Fast-Track을 통해 공적채무조정이 필요한 서민에 대한 상담을 통해 각종 신청서류 작성 등을 지원하고,

- 최장 9개월 정도 소요되던 공적채무조정 진행기간을 최소 3개월로 단축하며, 약 200만원의 소요비용을 절감*하도록 함

* Fast-Track 절차를 통해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, 파산 관재인 비용·인지대·송달료(취약계층인 경우)을 신용회복위원회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

□ 금일 법원행정처와 업무협약 체결이 Fast-Track의 조속한 전국 확대 등 서민에 대한 촘촘한 지원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

○ 먼저, 자활 의지가 있는 서민의 채무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여 신속한 경제활동 복귀를 유도할 수 있음

○ 또한, 법원의 공적채무조정 및 사적채무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을 양 기관이 논의할 수 있는 場이 마련됨

□ 더불어, 금융위원회는 법원의 공적채무조정 이용자에 대한 금융지원, 법률지원 및 신용교육도 확대해 나갈 예정임

① 신용회복위원회의 법률지원단을 확충하여 신청서류 작성 등 Fast-Track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,

② Fast-Track 이용자가 취약계층인 경우 공적채무조정을 무료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하겠음

③ 개인회생 성실상환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고금리 대출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신용회복위원회의 긴급자금대출* 한도를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하고,

* 개인회생 인가자로 상환을 완료하거나 24개월 이상 성실상환한 경우 생계·운영·대환 또는 학자금 목적으로 33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대출 가능(연 4% 이내)

④ 공적채무조정 신청자가 다시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채무조정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신용교육을 지원하겠음

□ 앞으로 양 기관간의 협력 채널을 통해 공·사 채무조정간 연계가 강화되고 채무조정 제도의 보완·개선이 이루어져,

○ 연이은 한파에 뽕뽕 얼어붙은 서민들의 마음에 따스한 온기를 전할 수 있기를 기대함

□ 금번 업무협약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법원행정처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림